



#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 수영구보

호외 제677호 2022. 10. 20.(목)

### 규칙 · 지침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16

회 람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전략과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51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하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구 소속 공무원(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포함)”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1.~3. (현행과 같음) 4. “산하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u>구 소속 공무원(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포함)</u> ,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u>구 소속 공무원</u> -----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제증명 발급 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u>&lt;삭 제&gt;</u>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정하는 사항

<삭 제>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구,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삭 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p>	<p>&lt;삭 제&gt;</p>
<p>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 -----.</p>
<p>1.~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p>	<p>1.~2. (현행과 같음) 3.----- ----- ----- ----- 전가(轉嫁)----- -----</p>
<p>4.~5. (생략)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생략)</p>	<p>4.~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  
-----  
-----  
-----  
-----  
-----  
-----  
-----  
-----  
-----  
-----  
-----  
-----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제5조~제10조, 제19조, 제24조)
- 나. 용어 정비 (제20조의2제3호)
-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의 내용과 중복된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102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순서별”을 “접수 순서별”로 하고, “접수증”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  
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공익신고자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송부  
한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건을”을 “공익신고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생략)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접수 순서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작성하게 한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②  
(생 략)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생 략)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⑦ (생 략)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  
-----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송부한  
공익신고-----  
-----  
-----  
-----

1.~5. (현행과 같음)

④-----  
-----  
공익신고를-----  
-----  
-----  
-----.

⑤~⑦ (현행과 같음)

<삭 제>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② (생략)

<신 설>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생략)

제27조(징계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년-----

2.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2021.10.21.)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제19조)
- 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규정 삭제(제25조)
- 다. 징계 감면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무통보 규정 신설(제27조)
- 라.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제30조)